

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 열린다...초기구매 부담 완화

국토부, 규제특례 16건 의결 차체·배터리 소유권분리 허용 광주 자율주행차량 200대 등 10월부터 현대차 실증사업

전기차 구매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 온 배터리 비용을 월 구독료 형태로 나눠내는 ‘배터리 구독 시대’가 본격화된다. 또 광주에서는 도심 전역을 무대화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확대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초기 구매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리스사로부터 월 사

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낮춰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재활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효과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월 구독료 부담이 추가되는 방식이 사실상 금융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스사를 통한 체계적인 배터리 관리로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도 이번 규제특례 의결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에 대해 기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부여했다. 현재 일반 차량은 도로 주행을 위해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입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은 양산자 수준의 인증을 받기 어려워 실증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AI 기반 E2E(End to End) 방식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특정 구간이 아닌 광주 도심 전역을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광주 전역(500.97km)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특정 노선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가 단계적으로 도로 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차량

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대상 특수개조 차량 이동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드림꾸러미’ 선물 가정의 달 맞아 사회공헌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11일 지역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드림꾸러미’ 제작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광주은행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등 약 30명이 참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꾸러미 100쌍을 제작했다. 드림꾸러미는 학습용품과 보조가방을 비롯해 텀블러, 보조배터리, 저금통, 계산기, 전자 블록놀이 등 학습·생활용품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11일 지역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드림꾸러미’ 제작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광주은행

코스피, 7000 돌파 3거래일만에 8000 턱밑

4.3% 급등 7800선...외국인은 3조5084억원 순매도
삼성전자 28만원·SK하이닉스 190만원 장중 신고가

코스피가 11일 4%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이로써 ‘7000피’를 달성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8000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4.24p(4.32%) 오른 7822.2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31p(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5.35% 오른 7899.32까지 뛰어 7900선에 근접했다. 장 초반 급등세에 오전 9시 29분 코스피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호령금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증가 기준으로 ‘8000피’까지는 177.76p 남았다. 지난 6일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지 3거래일 만에 8000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58689억원과 6247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조5084억원 순매도해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우위를 보였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494억원, 3218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721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SK하이닉스는 11.51% 오른 18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할 때부터 8.72% 상승한 주가는 15.60% 오른 194만90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초로 190만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6.33% 오른 28만5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역시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28만8500원(7.45%)까지 뛰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균형성장 새 모델’ 전남광주특별시 청사진 구체화

광주연구원, ‘광주 Think Net’ 통해 심층 조망 SI·에너지·문화·자연 기반 7대 발전전략 담아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범로 제시됐다. 광주연구원은 계간 연구매거진 ‘광주 Think Net’ 제8호를 통해 행정통합 이후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번 제8호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현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기조와 ‘5극 3특’ 정책 방향 속에서 통합특별시의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과 책임을 갖춘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서의 가능성과 특별법 기반의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기획는단에서는 세 편의 연구를 통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정책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자기인결정 지방정부’를 통해 자치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자기인결정 지방정부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과 김연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으로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도적 설계와 정책적 의미’에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 조항을 분야별로 분석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또 문연희·황성용·김연수 연구위원 등 광주연구원 연구진 8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통해 통합 이후의 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구체화했다. 연구진은 ‘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오는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조성, 경제규모 300조원 달성, 광역인구 500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는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주력산업 대전환 및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구축 △도시·농어촌 균형 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시민주권 기반 통합특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칼럼에서는 이진 전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제안’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과제와 조건을 제시했다. 최지국 광주연구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미래 성장을 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실질적 성과와 시민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AI디지털 배움터 교육’ 확대

교육 거점 4곳으로 늘려...12월 10일까지 전연령 대상

광주시가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 배움터’ 무료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존 2곳이던 교육 거점을 4곳으로 확대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운영 거점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동구) △태봉노인복지관(북구)에 더해 올해부터 △서

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서구) △광주시립하남도서관(광산구)을 추가 지정해 총 4개 거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광주시립하남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코딩 교육’을 특화 과정으로 운영해 미래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만6105명이 참여한 ‘AI디지털 배움터’는 올해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교육 비중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와 일하기 △가짜뉴스 판독법 △일상생활 속 AI 활용 △시를 활용한 사

진 편집·영상 제작 등 AI 분야와 △코딩과 친해지기 △유튜브·틱톡 숏폼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유튜브 제작 △생활 밀착형 앱 활용법 등 디지털 분야로 구성됐다. 또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직무 생산성 향상과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신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상담존도 함께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키오스크와 AI는 김진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거점인 하남도서관과 서구청 로비에서는 가상현실(VR), 바둑로봇, 코딩로봇, 로보틱 등 다양한 첨단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장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안내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과 학교, 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파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이나 전용 콜센터로 통해 가능하다. 체험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하남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시간대에 운영된다. 박혜미 광주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AI·디지털 소외계층을 줄이고 시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는다...실거주 의무도 완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우대율 14.8%→20.5%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이 늘어나고, 가입 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 3000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임원, 자녀 불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만 55세 이상일 경우엔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값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